

李 대통령-시진핑, “한반도 평화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

한중 정상은 1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1시간 35분가량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간 경제·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폭넓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평화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지역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며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같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 대화가 핵심이라는 인식 공유도 있었다. 위 실장은 “양측은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소노캄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민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시진핑 中주석 11년 만 국빈방한… 李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
李 “중북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긍정적… 대북 관여 조건 형성”
시 주석 “지역의 평화·발전 위해 긍정적 에너지 불어넣을 용의”
북미 대화 중요성 공감… 한화오션·서해·한한령·공급망 논의도

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한중 관계가 공유해온 역사적 경험과 상호 호혜적 협력의 기반에 변함이 없다고 보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정례소통 채널을 가동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민생 분야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환경 분야 교류 확대와 인적 왕래 편의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서해 구조물 문제,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해제, 히토류 공급망 등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문제가 풀리면 그런 기류 속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 문제와 한한령도(논의가) 이뤄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연내 출범 ‘빠격’… 광주시민 71% “전남과 광역연합 필요”
광주시의회 시민 700명 설문… 산업·경제·교통우선
응답자 절반 “광역연합 잘 모른다”… 막연한 공감?

광주-전남 광역연합 연내 출범이 일부 주체의 보이콧으로 기로에 놓인 가운데 광주시민 10명 중 7명은 광역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제·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반면 일부 시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간 균형발전, 권한 배분 문제에 우려감을 표했다.

2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역연합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1.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부정 또는 부정’이라고 답한 응답층(28.6%)의 2.5배에 달했다.

성공 조건으로는 ‘일관한 이해관계 조율’(3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명 중 1명 꼴로 두 지역의 신뢰와 협력을 우선시한 셈이다. 다음으로 ‘공공사업 발굴’(21.3%) ‘중앙정부 지원’(18.3%)이 뒤를 이었다.

우선 협력 분야로는 ‘산업·경제 활성화’(32.3%)와 ‘광역교통’(31.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관광·문화’(17.7%), ‘복지교육’(10%), ‘환경·에너지’(8.1%) 순이다. 특히 제1호 공동 사무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69.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광주-전남 상생 발전’(43.6%)이 가

장 큰 기대효과로 꼽혔고 다음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25.9%), ‘행정 효율성 향상’(21.7%), ‘주민 서비스 개선’(8.7%) 순이었다.

반면 우려스런 점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26.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23.5%), ‘권한 배분 갈등’(22.1%), ‘행정 비용 증가’(17.3%), ‘추진 불투명성’(10.5%) 순으로 조사됐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광역연합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점도 과제로 확인됐다. 광역연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은 시민은 5.9%에 그친 반면 ‘전혀 모름’은 49.9%에 달했다. ‘전혀 모른다’고 답해 상당수는 광역연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성에는 막연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의회 의뢰로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안원환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였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광역연합이 지역 상생과 공동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회 728조 예산정국 돌입… 여야, 李 확장재정 공방 전망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기조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예산안조정소위를 진행한다. 그리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다. 전년도의 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뿌리 씨앗이 부족하다고 발을 묶어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적극 재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국정철

학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빚더미 예산’이라고 지적해왔다. 또한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현금 지원성 예산에 대한 삭감 의사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상반됨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겨 12월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광산구의회, 무안공항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재검토 촉구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공사 조기 완료, 운항 인프라 보강 촉구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10개월째 운영이 중단되면서 호남권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와 지역 경제 붕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광

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정부와 관련 기관에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30일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천대1·2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

를 통해 “무안공항 장기 폐쇄로 호남권 주민들은 국제선 이용을 위해 인천, 김해, 대구 등 원거리 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그 여파는 지역 여행업계의 존폐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까지 추산된 광주·전남 여행업계 매출 손실액은 1천억 원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2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도 버텼던 여행업계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요청을 묵살하고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 연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호남권의 대외 이미지와 지역 발전 동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 간 갈등

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정부가 무안공항의 활주로 연장 공사를 조기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무안공항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호남권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며 “무안공항 폐쇄 연장 조치에 그치지 말고 재개항 일정과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무안공항 폐쇄가 장기화된다면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운항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호남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준행 기자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

당신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